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 우 영*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통일교육과 대학통일교육
Ⅲ. 대학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Ⅳ. 맺음말

Ⅰ. 문제제기

최근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제7차 교과과정 개편 과정'에서도 통일교육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몇몇 학교는 통일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시민단체에서도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시민단체에서 통일과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통일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1] 이와

*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 카톨릭, 경실련 등은 통일과 관련된 독립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계종은 통일 문제를 다루는 잡지를 발간하고 이와 연관된 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조민, 「통일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6) 참조.

같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과 독일 통일이후 활성화되었던 통일에 대한 성급한 기대가 일종의 '거품'으로 판단되면서 통일 문제를 보다 냉정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독일 통일의 갖가지 후유증을 목격하면서 통일을 이루는 것 못지 않게 어떤 과정을 거쳐 통일을 이루는가도 중요하며 바람직한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북한체제의 붕괴 여부가 관심사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붕괴는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면서 관념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로서 통일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한 이탈 북한 주민들의 영향이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급증하는데 비해서 이들을 남한사회에 정착시키는 준비는 미비하여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이 결과 통일 이후 북한주민과 남한주민과의 인간적인 통합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정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는 불충분하다. 또한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통일교육은 시행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없이 통일교육이 추진된다면 과거 권위주의체제 시절의 반공교육과 같이 지배집단의 체제유지에 기여하는 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입시와 학점만이 중시되는 현재의 교육 풍토 하에서는 새로운 교과목의 증설로 학생들에게 수업의 부담만 더해질 수 있다. 그리고 통일교육과목을 어느 학과가 담당하여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학문간 이해 다툼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 글은 바람직한 대학통일교육의 교육 방향과 내용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대학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통일교육과 대학통일교육

1. 통일교육의 변천과정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대학통일교육도 전체적인 통일교육 체계의 한 부분이며 동시에 초·중등 통일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통일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 체계의 전반적인 특성과 초·중등 통일교육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방이후 미 군정기에는 '일반명령 제4호'에 따라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방침'이 정해졌는데 여기에는 통일은 물론이고 반공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으며, 남한 정부 수립초기에는 반공이 강조되기는 하였으나 교육차원에서 반공교육이 체계화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제1차교육과정'(1954년)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이다. 이후 현재의 '제6차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2] 통일관련 교육은 '반공교육'→'통일·안보교육'→'통일교육'의 변천과정을 거쳐 왔다고 볼 수 있다(〈표 1 참조〉).[3]

지금까지 반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국방·안보교육,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 이념교육, 안보교육, 국민정신교육, 통일·안보교육 및 통일대비교육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통일교육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2) 전반적인 교과내용을 규정하는 교육과정 개편은 제1차(1954년), 제2차(1963년), 제3차(1973년), 제4차(1981년), 제5차(1989년)의 단계를 거치면서 현재 중학교는 1995년부터, 고등학교는 1996년부터 제6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3) 통일원, 「통일교육 기본 방향」(서울 : 통일원, 1990), p. 35 ; 최완규 외, 「21세기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서울 : 교육부, 1996) 참조.

〈표 1〉 통일관련 교육의 변천과정

교과과정	통일관련 교육의 위상	교육내용 및 목표	비 고
제1차 (54년)	• '사회생활' 교과의 일부분으로	• '도의교육'의 일환으로 실행됨. 반공과 항일이 목표	
제2차 (63년)	• 초·중등학교 : '반공·도덕' 교육의 독립 • 고등학교 : '국민윤리'	• 사회생활과와 분리된 반공교육	• 1969년 '반공 및 국민윤리'로 개칭 • 1970년부터 대학에서 국민윤리 교과 설치
제3차 (73년)	• 반공을 제외하고 '도덕'교과로 정규화	•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 하고, 공산주의 침략을 격멸함으로써 승공통일을 이룩하고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게 함	• 통일교육 관계 교재인 '승공통일의 길'과 '자유수호의 길' 별도 제공 • 1977년 서울대학교에 '국민윤리학과'를 대학원과정으로 설치 • 1981년 전국의 국립사범대에 '국민윤리교육과'설치
제4차 (81년)	• 반공교육의 영역 확대	• 공산주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역량을 길러 민주적 평화통일의 신념을 정착	
제5차 (89년)	• 반공교육을 '통일·안보교육'으로 개칭	• 반공영역의 내용을 반공체제 및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우리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대	• 고등학교 '국민윤리'교과서에는 북한은 우리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체로 강조하는 동시에 우리의 반쪽으로 언젠가는 합쳐야 할 형제로 묘사
제6차 (95년)	• '통일·안보교육'이 '통일교육'으로 • 안보교육은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 유치원 : 북한에 대한 관심 가지기 • 초등학교·중학교 : 초등학교3학년부터 '도덕'과목 중 '국가·민족생활' 영역에서 분단상황, 북한현실, 통일의 당위성 교육 • 고등학교 : '윤리'과목 중 통일과제 영역에서 통일문제, 통일의 조건 통일이후의 전망을 다룸	• 대학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내용 없음

* 최완교 외, 「21세기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참조.

첫째, 기존의 통일교육은 정확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안보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다. 체제경쟁을 전제로 북한의 대남침략에 대응하여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것보다는 북한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여 북한을 열등한 상대로 인식하게 하는 한편, 북한체제의 호전성을 강조하여 북한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의 주요 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존의 통일교육은 정권의 유지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대치 국면을 강조함으로써 권위주의적 정권 유지의 필연성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통일교육과정에서 정부 통일정책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반면 민간부문 통일논의의 문제점을 부각함으로써 통일논의의 정부 독점을 정당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셋째, 통일교육이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또는 자유주의 체제의 우월성 강조 등 체제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통일문제를 체제통합의 문제로 인식한 결과 통일교육에서 남북한 체제비교나 통일정책의 적실성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통합이나 심리적인 차원의 인간통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다.

넷째, 통일교육이 일방적이었다. 통일교육의 내용구성이나 방법 설정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사회집단의 통일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통일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이 수렴되지 못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섯째, 기존의 통일교육은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인 교육체제와의 연계성, 시민교육과의 체계적 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채 파편적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통일교육과 유관한 정부부처들간에도 통일교육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부재하였다. 또한 정치논리에 따라 통일교육이 강화되기도 하고, 경시되기도 하는 등 통일교육에 대한 일관된 체제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천편일률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교육단

〈표 2〉 학교에서 배우는 통일교육에 대한 견해

		흥미있고 유익하다	더 많이 가르쳐주면 좋겠다	시험때문에 공부한다	관심없고 지루하다
전 체		8.4%	48.8%	26.4%	16.5%
교육 단계별	중학생	10.7%	54.8%	19.8%	14.7%
	고등학생	6.1%	38.9%	33.2%	21.8%
	대학생	7.9%	55.8%	27.0%	9.4%

출처 : 한만길, 「건전한 통일관 형성을 위한 교육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제1회 통일대비 교육 포럼 발표논문(1996. 10. 30).

계, 교육주체에 대한 고려 없이 대동소이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 위주의 교육이 중심을 이루었다.

통일교육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은 현재 통일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평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지역의 중학교 581명, 고등학교 545명, 대학교 294명 등 총 1,425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통일 의식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4] 따르면 통일교육이 흥미 있거나 유익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8.4%에 불과하다(〈표 2 참조〉). 반면에 더 많이 가르쳐주면 좋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48.8로 통일교육에 대한 욕구는 적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까닭으로 더 많이 가르쳐주면 좋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고 시험 때문에 공부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2. 대학통일교육의 현황

6차에 걸친 교과과정 개편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4) 한만길, "건전한 통일관 형성을 위한 교육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제1회 통일대비 교육 포럼 발표논문(1996. 10. 30).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통일보다는 반공이나 안보교육이 강조되었던 교육체계 아래에서 대학에서도 통일교육보다는 반공교육이 강조되었다. 1970년대까지는 학도호국단체제하에서 군사훈련을 받았고, 1980년대에는 이념교육이라는 명목하에 대학생들은 국민윤리 교과에서 공산주의와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교육을 교양필수로 이수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대학통일교육도 초등이나 고등 교육단계의 통일관련 교육과 차별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통일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에서 통일과 연관된 교과목은 국민윤리 교과라고 할 수 있다. 1968년 정부는 국민윤리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채택할 것을 각 대학에 권장하였고, 2년 후인 1970년 국민윤리 교과목이 설치되었고, 교육법 시행령 제119조를 개정하여 이를 필수과목(2학점)으로 지정함으로써 1988년까지 국민윤리는 '국책과목'으로 자리를 잡았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 국민윤리 교과목은 학생들이 2학점씩 2학기에 걸쳐 이수하여야할 필수과목이 되었고, 이념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1989년에 국민윤리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채택할 것을 각 대학의 재량에 맡겨졌으며,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국민윤리를 교양 선택과목으로 개편하였다. 1990년에 문교부는 대학 국민윤리 과목의 존폐 여부를 대학의 자율에 일임하였고, 이를 계기로 대학 교양 과목에서 국민윤리라는 과목명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를 대체할 과목들이 점진적으로 개설되었다. 이 가운데 통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과목들로 '민주 시민의 윤리,' '현대 민주주의론,' '현대 정치와 이데올로기,' '북한학,' '한반도 통일론,' '한국 정치론' 등이 있다.[5]

국민윤리로 대표되는 기존의 대학통일교육은 엄격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이라기 보다는 반공교육이고 안보교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양필수로 선정하면서까지 반공이나 안보교육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했던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0년대부터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북한 바로 알기'운동은 학생들에게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5) 최완규 외, 「21세기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서울 : 교육부, 1996), p. 203.

이것이 재야 통일운동의 시초가 되었다는 사실은 기존의 반공·안보 교육이 지극히 비효과적이었으며, 설득력도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윤리 과목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고, 곧 이어 교과목이 폐지된 것은 사회의 민주화 현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과거의 일방적인 반공교육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민윤리 교과의 폐지는 통일관련 교과목이 학교에 따라 없어지거나, 대학교과과정에서 통일관련 교과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3〉은 필자가 입수가능한 대학의 과목 요람을 통하여 대학의 통일교육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103개교 가운데 통일관련 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40개교에 불과하였고 그 가운데 8개대학이 두과목 이상의 과목을 개설하였고, 나머지는 한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과목내용은 '북한의 이해'나 '북한학'과 같이 개괄적인 과목이 주를 이루었고, 다음으로 '북한의 사회'와 '북한의 문화' 등의 과목이 많았다. 통일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통일관련 교과목이 개설된 학교의 수도 적고 또한 개설된 통일관련 교과목의 숫자도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설된 과목이 대부분 개괄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인 분야를 다루는 과목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표 3〉 대학의 통일교육 현황

과 목 명	숫 자
통일문제·한반도 통일론	10
북한의 정치	6
북한의 이해·북한학	14
북한의 정치와 사회	6
북한 경제	1
북한 사회의 이해·북한 문화	13

* 대상 대학 총수 103개 중에서 통일관련 교과 개설 학교수는 총 40개교였음. 2개 이상의 강의를 개설한 학교는 8개교.
* * 북한학과는 제외.
* * * 각 대학의 요람을 참조

국민윤리 교과목의 폐지이후 교양과정이나 전공과목에서 부분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되었으나, 고등교육기관이 대학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통일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일차적으로 몇몇 대학에서 「북한학과」가 개설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4년 동국대학교(야간·40명)를 시작으로 명지대학교(야간·40명, 1995년), 관동대학교(주간·50명, 1996년), 고려대학교(주간·30명, 1997년)에 「북한학과」가 설립되어 현재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 학부의 북한학과는 아직 초보단계 이지만 특수 대학원의 북한학 혹은 통일정책 관련 교육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1996년 현재 서강대학교의 공공정책대학원을 비롯하여 총 13개 대학에서 통일관련 특수 대학원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6)]

현재 학부 북한학과와 대학원에 통일관련 학과를 두고 있는 주요 대학에 개설된 교과 과정은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현재 북한관련 학과를 개설한 대학의 교과과정은 주로 북한 정치와 체제 그리고 통일정책에 중점이 두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기초로 정치학이나 정책학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데올로기 연구, 조선로동당 연구, 북한 지도나 연구 등 북한 정치와 관련된 과목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관계나 동북아정치와 같은 국제정치학과 관련된 과목도 적지 않다. 반면에 경제를 다루는 과목은 상대적으로 적고, 북한의 사회나 일상생활 그리고 문화를 다루는 과목은 더욱 적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북한학과는 북한정치학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편중적으로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다면 학과의 교육목표인 "북한학은 한반도 분단의 원인과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 발전과정 그리고 북한의 현실을

6)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대학원(북한정치경제 전공),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평화안보학과, 동북아학과),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북한 및 지역연구학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외교안보학과),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안보행정학과, 북한학과 1.2군),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통일정책학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북한학과), 아주 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정책학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북한학과), 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외교안보학과 북한전공),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안보통일정책 전공),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안보정책전공).

〈표 4〉 북한학과 교과과정

학 교	학과	교 과 목
동국대	북한학과	• 정치학개론 • 북한개론 • 사회주의체제론 • 북한정치론 • 해방전후사연구 • 북한지도자연구 • 남북한관계론 • 정치이데올로기론 • 조선로동당연구 • 북한경제론 • 주체사상연구 • 국제관계론 • 북한 정치행정제도론 • 마르크시즘변천사 • 북한학연구방법론 • 북한대외관계 • 북한사회론 •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 북한의 대남정책 • 비교공산주의 정치 • 동북정치경제론 • 북한군사론 • 북한무역론 • 조총련연구 • 사회주의체제개혁론 • 한반도통일론 • 한국전쟁연구 • 제3세계와 북한 • 남북한체제비교론 • 분단국통일사례연구 • 북한문화교육론 • 북한 헌법과 법체제
명지대	북한학과	• 사회과학개론 • 최근의 북한정세 • 북한학개론 • 한반도와 국제환경 • 사회주의체제론 • 북한정치론 • 남북경협과 경제통합 •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 남북한관계론 • 냉전과 분단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 북한사회론 • 조선로동당사 •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 북한의 문학과 예술 • 동북아 국제관계론 • 비교공산주의 • 북한의 통상 및 산업정책 • 북한경제론 1.2 • 남북한 통일방안과 평화 • 맑시즘의 이해 • 북한의 미디어 정책 • 사회주의정치경제론 • 국제공산주의운동사 • 북한의 헌법과 법체제 • 주체사상론 • 북한행정론 • 중·러·북한의 경제협력 • 북한의 외교 • 비교혁명론 • 북한의 개혁과 대외개방 • 북한학연구방법론1·2 • 사회주의체제 개혁론 • 북한의 엘리트와 리더쉽 • 한국전쟁사 • 동아시아 정치경제론 • 북한의 정치문화와 사회화 • 공산체제의 붕괴와 그 이후 • 통일한국과 체제통합 • 김일성연구 • 북한군사론 • 분단국 통일 사례연구
숭실대 통일정책 대학원	통일정책학과	• 정책학원론 • 북한학 •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 북한정치론 • 남북한 경제체제연구 • 한국정치론 • 현대정치이데올로기 • 서구사회주의 연구 • 분단문제와 통일 • 강대국 외교정책론 • 한국공산주의운동사 • 남북관계론 • 북한행정론 • 남북한법률연구 • 북한군사론 • 북한원전강독 • 북한특강
서강대 정책 대학원	북한학과	• 북한학총론 • 주체사상 • 북한정치론 • 공산주의론 • 한국공산주의운동사 • 북한원전강독 • 북한행정론 • 북한경제론 • 북한사회론 • 북한외교론 • 북한군사론 • 북한문화론 • 북한의 대남전략 • 북한인민 생활연구 • 비교공산주의체제론 • 남북한체제비교 •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 북한의 인문지리 • 북한의 문학 • 북한의 문학예술 • 북한의 언어 • 북한 정치사 • 조선노동당연구 • 김일성·김정일리 평전 • 북한의 산업구조 • 북한의 대외무역 •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 조총련 연구 • 북한헌법과 통치구조 • 북한의 교육 • 북한의 한국사 인식 • 남북한 통일정책비교 • 통일한반도의 미래상 • 동북아 국제질서와 통일외교 • 남북한 경제협력론 • 통일과정론 • 독일통일연구 • 북한 특강 I · II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분단된 민족과 국토를 슬기롭게 통일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학문으로서, 북한학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과 연구방법론을 체계적으로 학습케하여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정착 및 민족의 재통합에 기여하는 북한 전문가를 양성함"(동국대)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북한학과가 북한정치나 체제문제 등에 치중된 교과과정을 갖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북한학과가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주도로 개설되었고 인원구성도 정치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개설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의 경우 교육학자 1인이 현재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으나 그밖에 동국대는 정치학자가 3인, 명지대는 정치학자가 4인, 관동대는 정치학자 1인이 전임교수진을 구성하고 있다. 특수대학원의 북한학과의 경우 별도의 전임 교수진은 없으나 대부분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가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학과가 독립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통일관련 교과목이 교양 과목으로 실시되거나 정치외교학과의 전공선택 과목으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현재 몇몇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관련 교과목의 강의 구성을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통일관련 교양과목의 중심은 「북한의 이

〈표 5〉 통일관련 과목의 강의 내용

학 교	과 목	내 용	비 고
성균관대	북한사회의 이해	• 북한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문화적 거리감 인간적 친근감 • 종교와 문화 • 김일성과 김정일 : 인물과 사상 • 정치체제 • 주체사상 • 군부의 역할과 군사화 • 경제체제와 발전전략 • 사회구조와 사회발전 • 외교정책과 외교관계 • 통일은 어떻게 오는가? • 사회주의 체제의 발전과 변화 전망	• 담당교수 : 사회학
중 앙 대	남북 사회 비교	• 남북의 이질화 및 체제 비교 • 남북의 사회 및 법률제도 • 남북의 정치제도 • 남북의 경제생활 • 남북의 주민의식의 차이 • 남북의 가정생활 • 남북의 교육생활 • 남북의 문화생활	• 담당교수 : 경제학 • 남북학생동시수업 • 시민교육적 성격

학 교	과 목	내 용	비 고
서 강 대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 통일문제의 이해(1), (2), (3) • 독일, 베트남, 예멘, 중국 사례	• 담당교수 : 정치학 • 정외과 전공과목
숙명여대	북한의 이해	• 북한 정권과 주체사상 • 권력구조와 조직 • 사회, 문화 정책과 정치 사회화 • 북한의 영화 • 경제체제 및 정책 • 외교정책 • 군사 안보 정책 • 핵정책 • 북한의 대남 통일정책 • 김정일체제와 북한의 변화 전망 • 남북한 교류협력확대 및 통일과정 논의	• 담당교수 : 정치학
한 양 대	북한사회의 이해	•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와 북한 • 냉전의 붕괴 • 중국의 자본주의적 개혁과 개방 • 북한의 정치체제 및 사상 • 북한 경제체제와 개혁·개방 전망 • 북한의 산업화 전략과 대외교역 • 또 하나의 북한사회 • 가정·여성·노인과 가정생활 • 노동자·농민의 삶 • 청소년 및 대학생의 의식과 삶 • 북한의 영화 및 예술 • 사회통제와 일탈 •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본 남북 사회통합의 문제	• 담당교수 : 사회학 • 귀순자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 초빙강의
상 명 대	북한의 이해	•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일제하 사회주의자들의 이념과 활동 • 북한정권의 수립과정 • 북한 농민의 삶은 어떻게 변해왔나 • 북한영화 감상과 귀순학생과의 대화 • 김일성·김정일 연구 • 북한은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 북한 사회주의의 건설과정 • 유일체제와 주체사상 • 당·국가기구·대중단체 • 문학을 통해서 본 북한 사회 • 가정·여성·학생·대중문화 • 경제 현실과 전망 • 남북통일의 길을 찾아서	• 담당교수 : 사학 • 전문학자 팀티칭
연 세 대	북한의 정치와 사회	• 남북분단과 북한체제의 형성과정 • 북한 정치에서의 당과 군의 역할 • 북한의 대외관계 • 북한의 핵문제 •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북한의 경제적 위기 • 북한의 사회구조 • 북한주민의 생활실태 • 북한의 언론 • 북한의 문화와 예술 • 김일성과 주체사상 • 김정일체제의 등장 • 북한의 통일정책과 남북통일의 전망	• 담당교수 : 정치학

해」류의 과목이다. 이 과목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강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북한체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강의에 담고 있다. 세부 강의 내용은 학교에 따라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교양과목을 책임지고 있는 학과와 담당교수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명대학교의 경우 사학을 전공한 교수가 과목을 책임지고 있는 까닭으로 북한의 역사 등 역사적인 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시되고 있으며, 정치학과에서 과목을 담당하고 정치학과 교수가 강의의 책임을 지고 있는 숙명대학의 경우에는 외교정책이나 군사·안보 정책과 같은 국제정치적인 맥락이 중시되고 있다. 반면에 사회학과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양대의 경우에는 가정생활이나 청소년 생활과 같이 북한사회의 일상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강의 진행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강사 1인이 전체 강의 과정을 전담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팀티칭 혹은 전문가 초빙과 같은 분담체제이다. 〈표 5〉에 나온 대학 중 한양대와 상명대가 강의를 분담하는 경우이다. 수업의 방법은 다른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강사가 강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여 발표하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강의의 진행이나 수업 방식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강의에서 북한영화 감상을 시행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영화 감상이 공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통일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감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통일관련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학교와 담당교수에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과목 자체에 대해서는 흥미를 갖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수강신청 인원도 적지 않다.[7] 한 대학에서 실시한 '북한의 이해'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에 따르면 가장 인상깊었던 주제로 꼽은 것으로 '북한 영화 감상'이 39.0%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북한의 문학' 12.4%, '탈북학생과의 대담' 11.8%, '북한경제' 10.9%, '김일성·김정일 연구'

7) 숙명여대, 상명대학의 경우는 수강 신청 인원이 400명을 상회하고 있고, 한양대학의 경우 행당과 안산 양캠퍼스에서 총 수강인원이 800명에 육박하고 있다.

7.6%, '북한의 문화' 2.4%, '항일무장투쟁사' 2.4%의 순이었다.[8] 또한 추가했으면 하는 주제로 '북한의 실상(29.9%)', '북한 교육(11.7%)', '북한 언어와 남북한 언어차이(10.4%)', '탈북학생과의 대화 확대(10.4%)', '통일방안 및 통일 후 남북한의 변화(9%)' 등을 꼽고 있다. 한 학교의 경우이므로 일반화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는 북한의 일상생활이나 사회문화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지역 각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와도 흡사하다(〈표 6〉 참조). 북한 과목이 아니라 통일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이므로 북한의 이해와 같은 교과목에 대한 요구와 사소간 차이가 있으나, 북한 분야에서는 북한사회의 실상을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있으며,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 예상되는 상황과 같은 실질적인 차원의 문제에 관심이 많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업 진행 과정에서는 학생들은 자료의 부족을 첫번째 문제로 꼽고 있다. 의욕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도 다양한 자료가 부족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도 여의치가 않다는 것이다. 자료에 대해서는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북한 원전에 대한 활용이

〈표 6〉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궁금한 사항

		북한사회의 실상	남북한의 통일정책	통일이후의 상황	통일에 대비하는 자세	궁금한 것 없음	기 타
전 체		27.9%	11.1%	39.3%	10.2%	9.7%	1.8%
교육 단계별	중학생	25.3%	11.5%	39.6%	9.6%	12.6%	1.4%
	고등학생	28.9%	9.6%	41.0%	7.2%	10.8%	2.6%
	대학생	31.6%	13.1%	35.5%	17.0%	1.4%	1.4%

출처 : 한만길, 「건전한 통일관 형성을 위한 교육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제1회 통일대비 교육 포럼 발표논문(1996. 10. 30).

8) 상명대학교 「북한의 이해」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법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로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가장 인상 깊게 받아들이는 북한영화 감상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통일원의 특수자료실에 반드시 가야하는데 일차적으로 수업이 잇달아 있는 학생들을 인솔하고 학교 밖으로 가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다. 현재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나 학생들은 수업시간내에 북한영화 관람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통일원 특수자료실의 수용능력은 최대 70명에 불과하여 대형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시청각교육도 근본적으로 어렵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수업 진행의 불만은 강의 내용이 피상적이라는 점이다. 강의 내용이 피상적인 것은 일차적으로 시간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 학기안에 북한 사회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며, 더욱이 중등교육과정에서 기초적인 북한관련 상식도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북한에 대한 심층적인 강의를 진행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리고 이에 못지 않게 강의를 담당한 교수의 능력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을 전공하는 학자라 하더라도 각각의 고유 전공이 있기 마련이고 자신의 전공과 동떨어진 내용을 강의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초빙강의나 팀티칭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업체제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형식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수업내용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III. 대학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대학통일교육의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대학의 통일관련 교육의 현황을 고려할 때 현재 다음의

몇 가지 차원에서 대학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통일관련 교과목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어떤 대학은 '북한의 정치와 사회,' '분단과 통일,' '현대 마르크시즘' 등 넓은 의미에서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된 강의가 많지만, 어떤 대학은 통일과 관련된 강의가 전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일년에 한 강좌에 불과하다. 특히 정외과나 사회학과와 같이 통일문제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학과가 있는 경우에는 교양으로 통일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공 선택 과목으로 통일과 연관된 과목이 개설되어 학생들이 수강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과가 없는 학교에서는 통일관련 교과목을 학생들이 들을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강의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강의 수가 부족한데서 비롯되는 문제이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통일관련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이해」이고, 이 과목은 담당교수에 따라 강의 내용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강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북한의 이해」는 북한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에 그치고 있다. 수업 진행 방식도 대부분 담당교수의 강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셋째, 담당교수의 전공에 따라 편향적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정치학을 전공하는 교수의 강의는 북한 정치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강의가 가능하나 다른 분야에 대한 강의는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통일관련 교과목을 정외과가 관장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북한에 대한 이해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이 정치학적인 관점으로 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사회 전반적인 통일교육이나 대학내 다른 교과목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중등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받은 통일교육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강의의 내용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각종 사회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관련 교육과의 관계, 언론 등에서 구현되는 통일문제와의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개별 전공과목 가운데 통일문

제와 관련이 있는 과목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대부분 통일관련 과목은 일회적인 강의로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북한이나 통일문제에서 구조나 체제의 차원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반면, 일상생활 차원은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강의의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북한사회의 현실이나 북한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심이 높다. 그리고 통일문제에서는 통일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등의 보다 실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일관련 강의는 북한의 이념체제나 권력구조, 그리고 남북한 체제비교를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통일문제에서는 통일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섯째, 북한학과의 경우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학과가 개설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졸업생을 배출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재학중인 학생의 대부분이 진로 문제를 걱정하고 있으며, 학문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회의가 많다. 또한 학과의 전임교수진이 정치학 전공자 일변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균형잡힌 북한 연구를 어렵게 할 뿐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통일문제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통일관련 교과목의 담당교수들의 능력 문제이다. 북한이 남한과 한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50년 동안 북한사회는 남한사회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회체계를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사회의 변형 내지는 남한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북한을 연구하거나 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대학에서 통일관련 교과를 진행하는 것은 올바른 통일문제 인식을 저해할 수도 있다.

2. 바람직한 대학통일교육의 방향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이 보다 다양해지고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음에도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나 방향 그리고 세부적인 단계별 통일교육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발전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일교육이 문자 그대로 통일문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의 근본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윤건영은 기존의 통일교육 논의를 종합하여 통일교육은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능력을 배양하고, 체제역량을 강화하고 통일문화를 창조하고, 체제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다(윤건영, 1992). 그리고 통일원은 대학통일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목표 또는 내용으로 ①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공산주의 체제와의 비교, 남북한 사회 비교), ②통일의 조건과 장애 요소, ③통일의 절차와 방안에 대한 이해, ④통일 후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제기될 문제, ⑤통일 후 국가 양태에 대한 신념 등을 지적하고 있다(통일원, 1995). 이와 같은 통일교육이나 이의 일부분인 대학통일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는 미래지향적이고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반공주의적인 통일교육관 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한다든지 체제역량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대결주의적이고 냉전적인 사고구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여전히 통일교육을 윤리나 도덕과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일문제의 상대편인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통일교육은 목표는 기본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의식을 개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통일과정에서 사회전체와 개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의 기본 목표는 대학통일교육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덧붙여 대학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인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적

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대학통일교육의 부차적인 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고려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대학통일교육의 실상을 고려할 때, 대학통일교육이 보다 긍정적인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통일관련 교과목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며, 통일관련 교과목간의 유기적인 연결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교양 과목이나 유관 학과의 전공과목에서 북한이나 통일을 다루는 독립된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고 동시에 과목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학교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개괄적인 과목과 통일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과목 등 두 개의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북한이나 통일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문사회과학 계통의 학과나 학부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새로운 교과목 개설과 더불어 통일문제와 관련있는 학과에서는 강의 내용에 북한 및 통일문제를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방후 문학사에 북한문학을 포함하고, 현대 한국 음악에 북한 음악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들이 학생들 보다 앞서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들의 북한 및 통일연구를 자극할 수 있는 보조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관련 과목의 활성화와 학생들의 교육 효과 확대를 위해서는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북한에서 발간되는 각종 출판물과 시청각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넷째, 북한학을 학문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학이나 미국학과 같은 지역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북한학은 학문적으로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 연구도 일종의 지역연구로 발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학과를 증설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학부제 하에서 북한전공을 제도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북한 및 통일관련 과목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대학통일교육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일문제 전문가를 대학에서 채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통일과 연관된 학문 발전을 위해서도 북한 및 통일문제 전문학자가 있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다.

여섯째, 통일교육의 교과목은 학제적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통일관련 교과목은 담당교수의 책임 하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강의에서는 다양한 전문학자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학교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일곱째, 통일의 실현과 완성에는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면 통일은 일종의 사회운동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과 관련된 학생운동도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학생운동을 자극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과 관련된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Ⅳ. 맺음말

대학의 통일교육이 활성화되는 것은 대학이나 대학구성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초·중등학교에서부터 사회교육에 이르는 전반적인 통일교육의 올바른 방향 정립이 이루어지고, 교육체제가 완성될 때 대학통일교육도 그 속에서 보다 높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초·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진 통일교육을 심화하는 것이 대학통일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대학통일교육은 다른 단계의 통일교육보다 우

선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초·중등과정에서 올바른 통일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교사의 확보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들의 양성은 결국 대학이 맡는 것이기 때문이다.[9] 이와 아울러 통일을 대비하는 사회적 작업의 시급성이 날로 더해가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대학통일교육의 활성화는 다른 교육과정의 통일교육체제 정비에 앞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대학과정에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전환, 그리고 현실에 적합하면서도 통일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일교육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9) 대학교육이 다른 교육단계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국악교육이 될 수 있다. 교육과정개편과정에서 국악교육을 음악교육과정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국악을 가르칠 수 있는 음악교사가 부족하여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